

지방공기업의 혁신방안



2015. 10. 1(목)

원구환(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목 차

I 지방공기업의 현황

II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III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방향



I . 지방공기업의 현황

1. 지방공기업의 현황

1)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유형

구분	단위			현행	개선방향	
지방 정부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기금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특별 회계	기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 직영 기업	상수도	지방공기업법	지방직영기업법(안)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공사	전액 출자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공단법(안)		지방공공 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민관 합자형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 한 법률		
지방공사·공단 외 출자·출연법인	주식회사(상법)					
	재단법인(민법)					
독립 법인체	출자·출연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 한 법률		

1. 지방공기업의 현황

2) 지방공기업의 목적 및 대상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 지방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 훼손 금지

■ 지방공기업의 대상사업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적용

영역	세부 사업	적용기준	적용유무	
			당연적용	임의적용
당연 적용 사업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	적용기준에 미달하 지만 경상경비의 5 할 이상을 경상수입 으로 충당할 수 있 으면 적용가능
	공업용수도사업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보유차량 50량 이상	√	
	자동차운송사업	보류차량 30대 이상	√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 · 교량 3개이상	√	
	하수도사업	1일처리능력 1만톤 이상	√	
	주택사업	주택관리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	
	토지개발사업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	
임의 적용 사업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 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적용가능	
	2.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1. 지방공기업의 현황

3) 충청남도 지방공기업의 현황

충남 (30)	소 계		30		
	광역	직영	1	충남지역개발기금	
		공사	2	충남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청산중)	
	기초	직영	22	상수도 (10)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홍성, 예산
				하수도 (8)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공영개발 (4)	천안, 보령, 아산, 계룡
		공사	1	당진항만관광공사	
		공단	4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1.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4. 9.25 시행)

출자·출연법인 (453)	출연연구기관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행정부)	16	100%:332 50-100%:45 25-50%:25 25%미만:51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 설립 법률(복지부)	30	
	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기청)	16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중기청)	9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법(문광부)	34	
	테크노파크	산업기술지원에 관한 특례법(산업자원통상부)	17	
	교통연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부)	4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문광부)	19	
	산업진흥원	SW산업진흥특례법(산업자원통상부)	21	
	산업디자인 센터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자원통상부)	4	
	장학재단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설립법, 민법 등(교과부)	126	
	여성연구·시설	여성발전기본법(여가부)	10	
	기타		147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례로 설립: 398(88%) 법률근거 없이 조례로 설립: 5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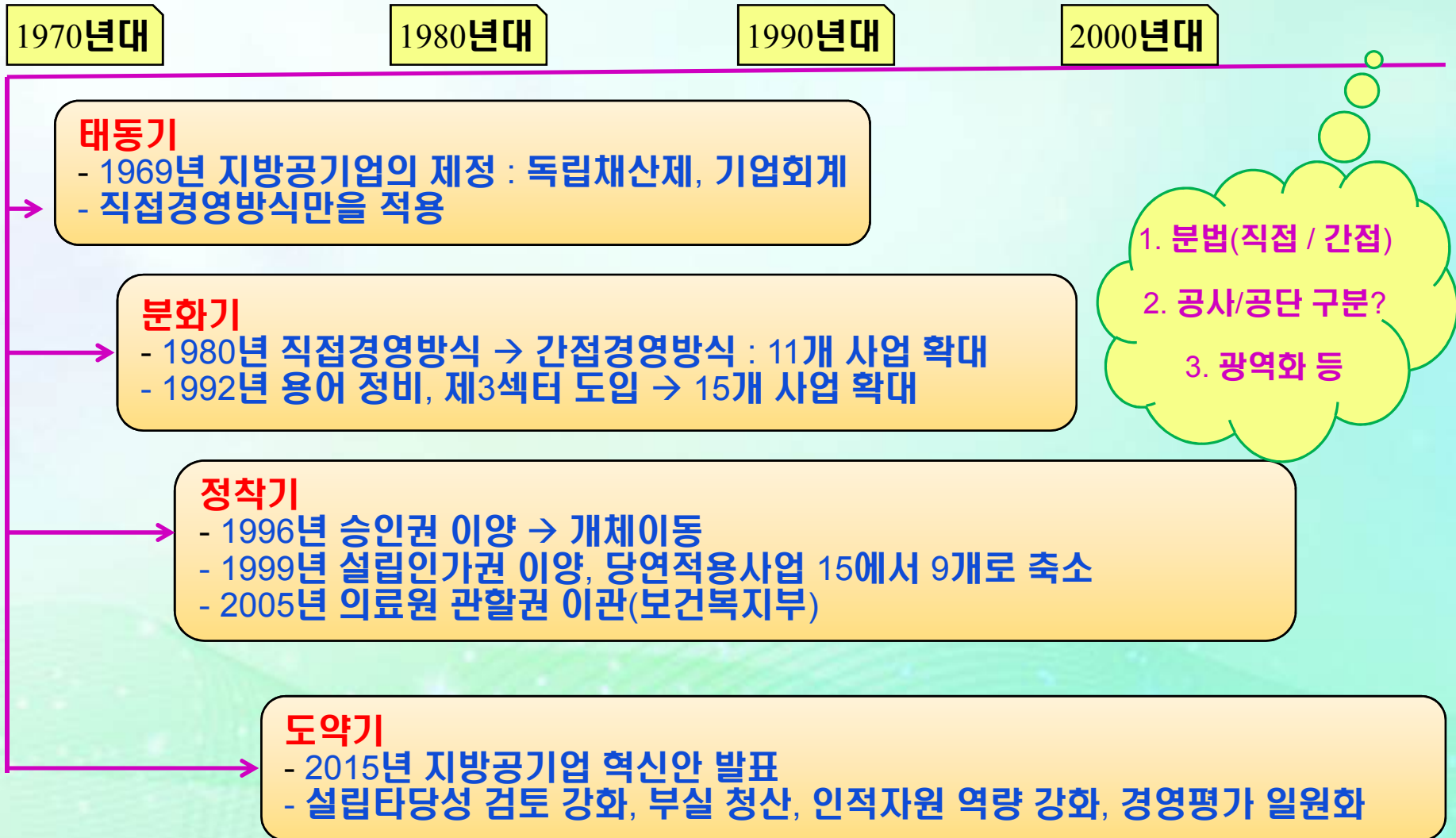
1. 지방공기업의 현황

5) 충청남도 출자, 출연기관의 현황

관리주체		기관명
충 남	본청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충남테크노파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시·군·구	(천안시)천안사랑장학재단, 천안시축구단, 천안문화재단 (공주시)공주시한마음장학회 / (아산시)아산문화재단, 아산시미래장학회 (보령시)재단법인만세보령장학회,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서산시)서산시복지재단, 서산인재육성재단 / (논산시)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 계룡시애향장학회 (당진시)당진문화재단, 당진시복지재단, 당진장학회 (금산군)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 (재단법인)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부여군)부여군굿뜨래장학회, 백제고도문화재단 (청양군)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 (홍성군)홍성사랑장학회,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예산군)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예산사랑장학회 / (태안군)태안군사랑장학회

1. 지방공기업의 현황

6) 지방공기업의 역사



1. 지방공기업의 현황

7)

지방공기업의 현황(2014년 결산결과)

국가공기업 316개 총 부채 520.5조(부채비율 201.6%)

구분(개)	자산(조원)			부채(조원)(부채비율)			경영손익(억원)		
	'13	'14	증감	'13	'14	증감	'13	'14	증감
합계(①+②)	174.2	177.9	3.7	73.9 (73.8%)	73.6 (70.7%)	△0.3	△11,826	△8,965	2,861
①직영기업(254)	82.9	87.0	4.2	21.7 (35.5%)	22.8 (35.6%)	1.1	△4,954	△4,905	49
·상수도(116)	27.5	28.5	1.0	1.3 (4.9%)	1.1 (4.1%)	△0.2	△299	△930	△631
·하수도(87)	33.3	35.1	1.8	5.3 (19.1%)	6.0 (20.5%)	0.7	△12,014	△13,362	△1,348
·공영개발(33)	7.5	8.5	1.1	2.6 (53.6%)	3.0 (55.4%)	0.4	5,388	7,538	2,150
·지역개발기금(18)	14.6	14.9	0.3	12.5 (590.9%)	12.7 (569.1%)	0.2	1,971	1,849	△122
②지방공사·공단(144)	91.3	90.8	△0.5	52.2 (133.9%)	50.8 (126.9%)	△1.4	△6,872	△4,060	2,812
·지방공사(62)	90.4	89.9	△0.5	52.0 (135.8%)	50.6 (128.6%)	△1.4	△6,831	△4,078	2,753
- 도시철도(7)	25.7	25.2	△0.5	6.1 (31.1%)	5.9 (30.5%)	△0.2	△7,748	△9,018	△1,270
- 도시개발(16)	58.8	58.7	△0.1	43.2 (276.6%)	41.8 (247.9%)	△1.4	1,242	6,331	5,089
- 기타공사(39)	5.9	6.0	0.1	2.7 (87.7%)	2.9 (90.4%)	0.2	△325	△1,391	△1,066
·지방공단(82)	0.9	0.9	0.0	0.2 (27.9%)	0.2 (32%)	0.0	△41	18	59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	84.0	83.6	△0.4	51.4 (157.3%)	49.9 (148.3%)	△1.5	△6,573	△3,449	3,124

Ⅱ.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방안

1.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추진
전략

◆ 구조개혁을 통한 지방공기업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부채감축을 통한 지방재정
부담 경감

◆ ‘설립-운영-청산’ 생애주기별
제도개혁을 통한 건실한 토대 마련

중점
추진
과제

1. 유사·중복 기능 조정
2.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3. 유형별 부채감축 추진

4. 지방공기업 설립 요건 강화
5.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6. 경영평가 체계 개편
7.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 및
절차 마련
8.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보공개 강화

1.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

1) 구조개혁 분야

□ 유사·중복 기능조정

- (현황) 지방공기업 간 또는 지방공기업 내부 조직 간의 유사·중복 기능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 (내용) 행정자치부에서 기능조정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 지자체 주도로 '소관 지방공기업 진단 - 대상기관 선정 - 기능조정' 추진
 * 기능조정 원칙 및 대상기관 선정 기준, 추진시 고려사항 등 포함
- (기대효과) 지방공공부문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 '15.4월 중 기능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상반기 지자체별로 공기업 진단, 하반기까지 대상기관 선정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추진

[1] 기관 통·폐합 계획 (총 102.22억 예산절감)		지자체	기대 효과
1	경제통상진흥원+신용보증재단+테크노파크+정보산업진흥원 ⇒ 통폐합	인천	△7억
2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문화재단 + 강화고려역사재단 ⇒ 통폐합	인천	△13억
3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 + 국제교류재단 + 의료관광재단 ⇒ 인천관광공사	인천	△22억
4	광주발전연구원 + 전남발전연구원 ⇒ 광주전남연구원	광주 전남	△5.54억
5	빛고을노인복지재단 + 광주복지재단 ⇒ 광주복지재단	광주	△2.28억
6	전남개발공사 + 전남관광(자회사) ⇒ 전남개발공사	전남	△44억
7	경기도시공사 + 경기개발공사(자회사) ⇒ 경기도시공사	경기	△2.4억
8	경북TP+하이브리드부품+그린카부품+천연염색연구원 ⇒ 경북TP	경북	△6억

1.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

1) 구조개혁 분야

(2) 기관 간 기능조정 계획 (총 20.86억 예산절감)

1	여성재단(교양사업)⇒ 여성발전센터 이관
2	대전마케팅공사(교통문화센터) ⇒ 도로교통공단 이관
3	대전테크노파크(IT기획, SW사업)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관
4	생물산업진흥원(한방산업 진흥) ⇒ 한약진흥재단 이관
5	테크노파크(신재생에너지 연구) ⇒ 녹색에너지연구원 이관
6	중소기업지원센터(조선·해양 유망기업 육성) ⇒ 테크노파크 이관
7	중소기업지원센터(소상공인 자금) ⇒ 신용보증재단 이관
8	완도 수목원(청소년수련원 운영) ⇒ 청소년미래재단 이관
9	김해시도시개발공사(김해전문대) ⇒ 김해문화재단 이관

지자체	기대 효과
광주	△1.5억
대전	△5억
대전	△1.2억
전남	△13.16억
전남	연구역량 혁신
전남	신규사업 창출
전남	효율성 증대
전남	효율성 증대
전남	효율성 증대
경남	효율성 증대

(3) 기관 내 기능조정 계획 (총 70.64억 예산절감)

1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 김대중센터, 광주환경공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그린카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경제고용진흥원,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3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4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5	테크노파크, 전남개발공사, 생물산업진흥원

지자체	기대 효과
서울 (2개)	△1.23억
광주 (14개)	△58.43억
대전 (2개)	△4.25억
울산 (3개)	△4.93억
전남 (3개)	△1.8억

(4) 공단 전환 및 협업 계획 (총 8.2억 예산절감)

1	경기도시공사와 기초도시공사 없는 지자체* 간 협업 (*광주, 이천, 부천, 오산, 광명, 수원, 안양, 과천)
2	창녕군개발공사 공단 전환 추진

지자체	기대 효과
경기	기초공사 남설방지
경남	△8.2억

1.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

1) 구조개혁 분야

□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 (현황)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민간분야까지 사업영역 진출

※ 골프연습장, 목욕장 운영, 레프팅장, 서바이벌체험장, 호텔, 편의점, 휴게소, 구내식장, 주류, 케이터링, 상업광고

○ (내용) 개별 사업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장성 테스트' 제도

- 현재 지방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시장성 테스트를 거쳐 민간이양 추진
-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 시장성 테스트 의무화

○ (기대효과)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 '15.9월까지 지방공기업 전수조사 및 시장성 테스트 실시

1.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2) 부채감축 분야

□ 유형별 부채감축 추진 (계속 추진과제)

○ (현황)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 부채감축 추진 중

※ '14년 추진결과 부채 1조 5,970억원 감축, 부채비율 10%p 감소

○ (내용)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 유형별 부채감축 추진, 매년 부채비율 10%p 감축, '17년까지 120% 달성

※ ('14)150% → ('15) 140% → ('16) 130% → ('17) 120%

○ (기대효과) '17년까지 부채 총 7.1조원 감축하여 지방공기업 및 지방재정 건전화

1.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3) 제도개선 분야

□ 지방공기업 설립 요건 강화

- (현황) 지방공기업 설립 시 타당성 검토 및 상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타당성 검토기관을 설립 지자체에서 선정함에 따른 공정성 저하 및 상위기관 협의절차 유명무실화
- (내용)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 원문 보고서 인터넷에 공개
 - 설립 전 설립심의협의회(행정자치부 주관)의 심의 제도 도입
 - 설립 타당성 평가 책임제를 도입하여 타당성 검토에 중대·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검토 기관 및 용역 참가자에 대한 책임* 부여

* 검토기관 : 5년간 배제, 용역 참가자 :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5년간 명단 공개

- (기대효과) 부실공기업 설립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방재정 낭비요인 제거
- ➔ '15. 하반기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상정 추진(8.13 국회 제출)

(사례) 완도군은 완도개발공사 설립과정에서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의 사전협의 의견이 부정적(설립타당성 검토 결과가 미흡, 광역 공사와 사업이 중복)임에도 '10년 10월 설립을 강행하였음. 이후 설립목적사업의 추진실적이 전무하고 공사 운영의 타당성이 낮아 '11년 청산명령을 받고 '14년 청산완료됨

1.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3) 제도개선 분야

□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 지정 운영

- (현황) 일부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한 사업추진이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로 이어지고 있음
 - (내용)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 추진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실명제* 도입
 - * 신규사업의 추진배경, 추진상황 및 결정·집행 관련자를 실명으로 관리 및 공개
 -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독립된 전담기관 지정·관리, 타당성 검토 결과 원문 보고서 인터넷에 공개
 - 타당성 평가 책임제를 도입하여 타당성 검토에 중대·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검토기관 및 용역 참가자에 대한 책임* 부여
 - * 검토기관 : 5년간 배제, 용역 참가자 :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5년간 명단 공개
 - (기대효과) 부실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임
- ➔ '15. 하반기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상정 추진(8.13 국회 제출)

1.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4) 제도개선 분야

□ 경영평가 체계 개편

- (현황) 평가 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공정성 및 수용도 저하,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기능 미흡
* 광역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 지방공기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
- (내용)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직영기업 제외)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환류기능 강화
 - 지방공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전면 재설계
- (기대효과) 경영평가 공정성 제고, 피드백 강화로 경영개선 지원
➔ 금년 중 평가체계 개편, 내년 평가부터 시범 적용

□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 및 절차 마련

- (현황) 경영평가 결과 부실공기업으로 진단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청산명령* 가능하나, 요건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既 6개 기관에 대한 청산명령 실시, 3개 기관 청산완료
- (내용) 청산 대상인 부실공기업의 요건* 및 청산 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 부채상환능력이 없고(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 50% 미만, 이자보상배율 0.5 미만), 사업전망이 없는 공기업
 - **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청산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에 따라 바로 해산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됨
- (기대효과) 부실 우려 공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사전에 촉진하고,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절차 진행
➔ '15. 하반기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상정 추진(8.13 국회 제출)

1.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4) 제도개선 분야

□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보공개 강화

- (현황)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미흡, 일방적 경영정보 공개에 따른 국민의 인식도 및 활용도 부족
- (내용) 신규직원 교육 의무화, 임직원 교육훈련시간을 확대하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역량평가제도 및 성과미흡자 관리방안 도입,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추진
 -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에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 신설,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정보제공
- (기대효과) 성과 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 맞춤형 경영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경영 기반 확립
 - ➔ 상반기 중 인적자원 역량강화 세부 추진계획 마련, 정보공개시스템 BPR/ISP 수립

Ⅲ.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방향

1. 지방공기업의 혁신 방향(OECD guideline)

가이드라인	시사점
효과적인 법령 및 규제체계 확립	·규제완화 및 운영상의 독립성 강화 + 공기업의 사업영역적 차원의 책무 강화 ·이사의 독립성 강화(공기업 이사 간의 교차 임면 금지) · 공기업 성과를 민간 및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 관심 제고
소유자로서의 정부	·공기업의 정부 소유기관 명확화(주무부처의 감독기능 체계화)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목표와 경영지침 명확화 + 통합보고서 작성 및 정책조정의 일원화 ·정부와 공기업 이사회 관계 투명화 및 공기업 성과 보고와 경영공시 강화 ·이사회 선임절차의 투명화(이사 자격조건의 구체화, 공개채용)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의견수렴), ·적정 이사의 확보와 독립성 보장 ·시민들의 권리구제 강화방안 마련, ·공기업과 시민 간의 연결장치 마련(전문기관 육성 지원)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이해관계자 협의체의 육성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 ·이해관계자의 발언권 강화
투명성과 정보공개	·공기업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명확화, 공기업의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요금체계의 개선 ·공기업 경영평가, 경영공시제도의 강화, 공기업의 비교평가 강화(유사 민간기업, 외국 공기업) ·공기업 회계감사시스템의 강화, ·성과평가 및 환류시스템의 강화
이사회의 책임성	·이사수 증대와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이사회 경영전략 의제설정에 대한 참여 의무화 ·정부 당연직 이사수의 감축, ·공기업 이사회에 대한 평가 및 교육훈련체계 확립

2. 규제와 자율 : 1865년 영국의 Red Flag Act



3. 경영혁신 목표의 명확화(동영상)



4. 고정관념 깨기(동영상)



Cliché(佛) (클리셰)

판에 박은 듯한 문구,
진부하고 식상한 표현을 가리키는 문학용어

5.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유명훈 대표 KOREA CSR CONSULTING GROUP)

<p>*Business Ethics 기업 윤리 / 윤리 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법적/경제적 책임 수행은 물론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인 책임의 수행을 기업의 의무로 인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익추구 활동과 기업 윤리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는 경영 -기업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 윤리의 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는 것 -경영활동의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는 기준을 윤리적 가치 체계에 두는 경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개인의 판단에 의존 -활성화 및 정착이 어려움 -일종의 감시 또는 통제 수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큼 -수동적, 방어적
Ethics is Basic		
<p>*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사회 속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하나의 기업 시민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법적, 윤리적, 경제적, 재량적 기대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부응하려는 노력 -관계의 질 개선과 상생에 초점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만족 활동을 통한 시너지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만족과 관계의 질 개선에 초점 - 관리의 용이 - 기업 활동의 모든 영역에 활용 가능 - 능동적, 공격적
CSR is a Tool		
<p>*Sustainability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보존에 대한 기업의 역할 강조 (환경 경영) -세대간의 형평성 추구 -삶의 질 향상 추구 -사회적 통합 (불균형과 불평등의 개선) 노력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실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경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 -개념의 구체화 및 활용이 어려움
Sustainability is a Goal		

5.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참고 사회적 신뢰 형성

- 국부창출 3대 요소: 자연자본, 생산자본, 사회자본(물적, 인적자본과 대비되는 무형자산)
 - * 사회구성원간 신뢰,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의식, 기업윤리 등 사회가치
- 사회자본과 국부창출
 - World Bank: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에서 사회적 자본이 국부창출의 핵심
 - 사회자본 국부창출기여도 : 선진국 국가 : 81%, 중진국 : 68%, 후진국: 50%
 - 한국: 세계 118개국 중 26위(1인당 10만 7,864달러; 선진국의 1/3 수준)
 - OECD 국가 평균 사회자본 크기 : 1인당 35만 3,339달러
- 사회적 자본의 4대 요소(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잣대: 국격과 연계)
 - * 신뢰성, 진실성, 단결성, 개방성
- 지방공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가치 향상은 사회자본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
 - * 공기업부패 방지 및 청렴성 회복 운동 (영국 처칠과 경찰관)

도덕성

EBS에서 제작한 영상을
10분 이내로 편집 하였습니다

원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jung2woo>
에 가시면 있습니다*^*~

다윗의 반지 올림



감사합니다